

삼성·LG, AI 집사robot 출시 연기… 차별화 기능 재정비

中, 시장 선점… 저가 공세 나서
韓, 고도화 AI 솔루션 대응 방침
“보안기능 강화, 중요한 과제 될 것”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인공지능(AI) 집사robot 출시가 연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 차세대 로봇의 등장으로 기존 AI 집사 로봇의 역할과 기능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AI 집사robot ‘볼리’와 ‘Q9’의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IT 박람회 ‘IFA 2025’에서도 양사는 출시 시점 변동을 시사했다.

용석우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은 “필드테스트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라며 “빨리 극복해 출시 시기를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



AI 집사robot ‘볼리’.

/삼성전자

성전자는 볼리 출시 시점을 당초 올해 5~6월로 거론했으나 하반기로 한 차례 미뤘다.

류재철 LG전자 HS(생활가전) 사업본부장은 “Q9을 개발할 때 (로봇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지 몰랐다”며 “아직 Q9 신제품 출시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양사는 올해 IFA 2025에서는 볼리와 Q9을 전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는 CES2020, LG전자는 2024에서 각각 볼리와 Q9을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당장의 제품 출시보다 성능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AI 집사robot의 차별화 기능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출시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꼽는다. 이미 로봇청소기에 AI 기능이 탑재돼 집안 가축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안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능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집사robot과 로봇청소기의 주행 동선이 겹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중국 가전기업들이 집사robot 시장을 선점하면서 경쟁 구도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10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내놓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도화된 AI 홈 솔루션 기능을 앞세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레인보우로보틱스·베어로보틱스

인수와 연구개발을 통해 가정용 서비스robot 분야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집사에 다양한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탑재해 아이와 반려동물 등을 살피고, 홈트레이닝 메이트로 활용하거나 재택근무 시 보조 스크린 역할을 하는 등 집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LG전자는 자체 AI홈 허브 ‘싱큐 온’에 Q9의 일부 기능을 이식하는 등 Q9 전략 개편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집사robot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집안의 구성원처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로봇의 표정과 대화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와 교감하고 가전기기를 연결해 가사를 돕는 방향으로 품팩터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카메라 센서를 탑재한 만큼 보안 기능 강화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민창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왼쪽)과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부사장이 MOU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남부발전 LNG병커링 사업 활성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5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국내 LNG 병커링(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창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과 박영철 남부발전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부발전은 2027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국내 LNG 병커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국내 LNG 병커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에너지 조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선도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창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남부발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물류, 공급망 전반에서 함께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환경 친화적인 선박 연료 공급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실현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고려아연, 임단협 타결

고려아연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고려아연은 38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갔다.

이번 합의에는 기본급 11만8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총 1100만원, 연간 최대 400% 성과급 지급 등이 포함됐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고 정년을 만 60세에서 61세로 연장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전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더해지며 고려아연은 위기 때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저력을 발휘해왔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장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며 비철금속과 전략·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창사 이래 단 한 차례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과 금, 은, 동 등 귀금속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102분기 연속 흑자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기중앙회·쿠팡·홈쇼핑, 물류협업 출범식

“우수 中企 제품, 로켓배송으로 경쟁력 강화”

홈쇼핑 입점 中企 로켓배송 지원
김기문 회장 “민간플랫폼 협력 강화”

홈쇼핑 입점 중소기업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제품을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쿠팡, 홈쇼핑이 중소기업들의 판로 및 물류를 지원키로 하면서다.

중기중앙회는 쿠팡, 홈쇼핑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물류협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 문재수 홈쇼핑 대표, 김석원 중소기업 우수상품추천위원회 총괄위원장, 한병준 중소기업 우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물류협업 출범식’에서 (왼쪽부터)김석원 중소기업 우수상품추천위원회 총괄위원장, 문재수 홈쇼핑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상품추천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은 중기중앙회·쿠팡·홈쇼핑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한 ‘홈쇼핑 입점 중소기업 로켓배송 물류망 지원 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대한상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 효과 약화”

사업 제약 등 다섯 가지 문제 지적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주가부양 효과를 약화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자본 확충·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에서 ▲자기주식 취득 감소로 주가부양역행 ▲해의 주요 경쟁기업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저해 ▲자본금 감소로 인한 사업 제약 ▲경영권 공격 노출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를 주주환원 수단으로 강제 소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상의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강제되면 취득 자체가 줄어들어 단기·장기 모두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직후 15일간 단기 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았으며 공시 이후 6개월과 1년 장기 수익률도 각각 11.2~19.66%p, 16.4~47.61%p 높아 주가 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임직원 보상,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온 자기주식을 소각만 강제하면 기업의 활용 폭은 크게 줄어든다.

또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입법례도 소각 의무화한 국가가 드문 점을 지적했

다. 영국·일본·미국 델라웨어주와 뉴욕주는 자사주를 자유롭게 보유·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독일은 자본금의 10% 초과분에 한해 3년 내 처분 의무를 두며, 캘리포니아주는 취득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한다. 실제 미국·영국·일본의 시총 상위 30대 기업 중 58개사(64.4%)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중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이 한국(2.31%)보다 높았다.

자사주는 M&A, 교환사채 발행, 자금조달 등에도 활용돼왔다. 상의는 특히 반도체·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사주 활용이 중요한데 소각 의무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업종처럼 기업 간 합병이 시급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 재무구조 약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곧 사업 가능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도 크다. 지난 ‘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되면서 경영권 방어 장치로 쓰일 수 있었으나, 소각 의무화 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강제하면 자본시장 발전에 역행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전제로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